



광주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수해현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



강기정 시장(맨 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 일행을 안내하고 있다.

## “돌봄은 시대정신, 통합돌봄의 성공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 ■ 민선8기 4년 '국내1호 핵심정책 제조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통합돌봄·AI 당지기·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 조례...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국내 1호' 정책들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이같은 혁신 정책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한 정책들이 정부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해 광주 혁신정책의 인척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된다"며 "시민의 편에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다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배경

에는 과감한 재정투입의 결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이미 취임 초에 효율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으로 축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축근의 반발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답=박현주 본지발행인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인데.

"맞습니다. 올 5월 광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 정책실장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태스트포스)를 구성했다. 아직 6자 TF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각 기관의 부단체장급이 참석해 3차와 4차 방식의 사전협의 3차례 가졌다. 소용피해 측정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군공항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이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자는 데에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타운홀 미팅 때 얘기했던 김산 무안군수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군공항 이전이 호남발전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남 서남권 공항이 열리면 호남지역에 기회가 온다. 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나, 마느냐의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을 중심으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을 비롯해 호남권에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은 광주의 문제, 전남의 문제, 무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무안공항을 통해 호남에 기회를 주려는 의도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호남지역에는 모처럼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무안군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돼도 7년, 10년 후에나 실현된다. 약 820만㎡(248만 평)에 달하는 군공항이 떠난 부지에는 최첨단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모빌리티 신도시에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100만명의 숲을 가꿀 것이다."

▲광주가 AI 선도 도시인데 향후 계획은.

"올해 AI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기본법에 따라 내년 초 <AI 집적단지>로 지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적단지 지정의 가장 큰 조건은 인프라 구축 여부다. 광주는 2년 전에 국가AI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 AI센터보다 11배 이상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추

다. 우선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개발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2000억원은 광주 곳곳에서 교통이나 안전, 돌봄 분야에서 실증하는 예산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현재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있는 첨단 3지구에 <AI노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과 실증, 상용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AI 생태계 확장이 목표다. 1단계로 유치한 300개 기업에 더해 추가로 700개 기업을 끌어들이 총 1000개 기업 집적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올 여름 폭우로 신안교 일대가 침수됐는데 복구는 되었

은지? "영산강변과 신안동 복개천 등 이런 곳이 또 침수됐다. 과거에 침수된 지역이 침수됐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중기대책으로 신안동과 양동의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신안동 복개도로 1.6km를 복원하는데 6000억 원이 든다. 지난달 대통령과 영산강변에서 복개도로를 걷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홍수 피해 대책으로 이런 점을 거론하지만 현실화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신안동의 침수 대책으로는 철도 교각 등을 철거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300억원이다. 그래서 침수 대책은 재정 투입이라는 하들을 넘어야 가능하다."

▲광주에서 민생회복 소비 쿨

리는 "소비쿠폰 문제가 불거진 후 곧바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59가지들 확인하고 사례별로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납고지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판단해 고치기로 했다. 오 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신속한 대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 통령은 광주시가 마련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 공유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향후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더 정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가 돕겠다."

▲광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 취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인가 고민했다. 그 때

서 나온 공약 1호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신청하지 않고도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380여 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다. 기초초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통합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인 저와 아내가 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통합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등교를 시켜준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나 각종 규정을 따지는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년간 해보니 복지 공약이 아니고 민주주의 공약이

"지자체장이 취임했는데 전임 지자체장이 임기 말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해 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공기관장이 버티면 결국 비리를 찾으러 다니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계속 봐왔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알박기죠. 이런 문제로 문재인 정부때 정은경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장의 알박기를 없애기 위해 시장이 그 만두면 모두 사퇴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면 제가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자리에 서 물러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장의 임기는 임명권자와 일치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통합돌봄이 관련법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단체장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AI당지기·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공공기관 알박기 금지조례 등 이재명 정부·전국 지자체 잇따라 강기정표 혁신정책 벤치마킹 분주

### 군공항 이전·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사업 순항중

가로 구축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두번째의 조건은 인재양성 사다리다. 광주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지스트, 한국에너지공대 등에서 AI 전문 인재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인재들은 158개에 달하는 AI 기업에 취업해 인재양성과 취업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가 집적 단지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순항 중인데.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실증장비와 대형 데이터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주요 산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내년 부터 5년간 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5년 동안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사용된

는지? "영산강변과 신안동 복개천 등 이런 곳이 또 침수됐다. 과거에 침수된 지역이 침수됐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중기대책으로 신안동과 양동의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신안동 복개도로 1.6km를 복원하는데 6000억 원이 든다. 지난달 대통령과 영산강변에서 복개도로를 걷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홍수 피해 대책으로 이런 점을 거론하지만 현실화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신안동의 침수 대책으로는 철도 교각 등을 철거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300억원이다. 그래서 침수 대책은 재정 투입이라는 하들을 넘어야 가능하다."

리는 "소비쿠폰 문제가 불거진 후 곧바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59가지들 확인하고 사례별로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납고지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판단해 고치기로 했다. 오 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신속한 대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 통령은 광주시가 마련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 공유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향후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더 정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가 돕겠다."

▲광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 취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인가 고민했다. 그 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통합돌봄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제정돼 내년 3월에는 전국에서 실시된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북구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025 광주대전 정책포럼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강기정 시장(오른쪽 네번째).



광주광역시는 AI를 활용하여 '열없는 25시간 당직'을 실행했다.